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지원해달라"

박성일 군수, 27일 군청 방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 강력 건의
이 의원 "입지 좋은 것 같다…중요한 사업" 당 차원 지원 여부 주목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의 최대 현안인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희망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박성일 군수는 27일 오전 지역현안 청취를 위해 군청을 방문한 국회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과의 면담 자리에서 "완주군은 국토부의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돼 있고, 현대차 등 수소상용차 육성을 통해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려 한다"며 "이를 위해 수소 전문기업과 지원기관, 연구소를 집적화할 수 있는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이 절실한 만큼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달라"고 강하게 건의했다.

박 군수는 "완주군에는 현대차 상용차 공장을 중심으로 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을 비롯한 전주기(全周期) 산업군과 연구기관이 운집해 있는 등 수소경제 인프라가 탁월하다"며 "현안인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올 하반기 국토부의 예타대상 사업에 포함되고, 나아가 20대 대선공약의 지역 대표사업으로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군은 지난해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하고,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 주요 사업으로 반영하는 등 현안 추진에 총력전을 경주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이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지역 현안을 적극 챙기기 위해 이렇게 방문하게 됐다"며 "모든 지역이 골고루 성장하는 것은 정당을 떠나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당 차원에서도 수소 관련 산업 지원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며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의 입지는 다른 지역보다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수소특화 국가산단 등이 조성되면 지역민들이 일자리를 얻어 정착할 수 있는 등 (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항"이라며 "완주군의 건의 내용을 잘 알겠다"고 언급, 당 차원의 지원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 출신인 이 의원은 국민의힘 전북동행 완주 국회의원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애정이 강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정운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통합위원회 소속 48명이 참여하는 '호남동행 국회의원 발대식'을 개최하고, 적극적인 지역 관리에 나섰다. 비례대표나 타 지역 의원들이 호남 48개 지역구를 제2의 지역구로 설정하고, 호남 민심과 현안을 껴안아 공감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체장애인연합회 박경노 전북협회장과 심동택 완주지회장 등이 함께 한 이날 면담에서 박 군수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완주지사 신설과 장애인 직접재활시설 확장 리모델링 등 복지 분야 현안도 동시에 건의했다.

정읍시, 시민과 함께 복지도시 만들기 총력

민선 7기 정읍시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로 나가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차별과 소외 없는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 2년 6개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누리는 포용복지 정책을 펼치며 으뜸 복지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사회복지 신규시책으로 복지서비스가 스며들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엔젤 복지 통신원 제도'를 도입해 추진해 왔다.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집배원과 전기·가스·수도 검침원 등으로 구성된 '복지 통신원' 1,004명을 모집해 인적 안전망을 구축해 왔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시행해 교통 불편을 해소했고, 1,350명의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대학교 신입생 장학금과 구직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또 주 소득자의 사망, 재난,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는 생계비·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을 길러내고 일자리를 제공하는'자활 근로사업'도 확대 지원하고 있다.

유진섭(사진) 시장은 올해도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복지 수요 확대에 맞춰 지역자원 발굴과 맞춤형 복지지원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수 기자

부안군, 저소득층 실명예방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부안군은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개안수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안수술비 지원은 저소득층 실명예방을 위한 노인성 안과 질환 사업으로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협력해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의 진단을 받고 의사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이다.

지원신청은 안과진단서, 진료소견서(수술명기재) 등 구비서류를 갖춰 보건소를 찾아 안질환 의료지원신청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원범위는 급여항목의 수술비와 사전검사비 1회(혈액, 소변, 심전도, 눈초음파) 지원하며 선정되기 전 발생한 의료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식대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이 제외된다.

/고병하 기자

지역포커스

군산 내항일대 때늦은 솜방망이 처분 논란

오랜 불법 폐기물 방치 업체에 일반 생활쓰레기에 해당하는 20만원 과태료

군산시가 장미동에 속한 내항일대를 온갖 폐기물을 쌓아놓고 장기간 무단으로 점유해 오던 바지선 운영업체의 소액 과태료 처분을 두고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논란이다.

특히 현장에 실제로 온갖 폐기물들로 가득 쌓여있는데도 사용업체가 사용 가능한 재료라며, 남의 재산을 안쪽까지 함부로 파헤치고 들여다 볼 수 없다는 군산시의 미온적인 행정이 그렇다.

게다가 오랜기간 방치된 대량의 폐기물들이 늘비했는데도 소량의 일반쓰레기 투기에 해당하는 20만원이라는 과태료 처분 또한 그렇다.

수년간 무단 투기 등으로 말썽을 빚은 정황에 비쳐보면 일반 가정집에서 버려진 소량의 폐기물에 해당하는 소액 과태료 처분은 형평에 맞지 않는 뒤늦은 봐주기식 행정이아니냐는 여론이다.

27일 군산시 과태료부과 관계자는 "소량의 생활폐기물로 판단하여 20만원의 과태료를 책정했다며, 그간 현장지도를 통해 쓰레기와 일부 폐기물 처리로 깨끗해진 상태이고 각종 건축폐기물과 폐타이어 등은 업체측에서 쓰는 물건이라해서 폐기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이곳을 지나던 한 시민은 "오랜기간 이곳저곳 드넓은 부지에 온갖 흉물을 방치해온데다 지금도 자질구레한 폐기물들이 가득 쌓였는데도 시민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될 군산시가 시민편을 들지않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손사레를 쳤다.

/백용규 기자

'완주형 푸드플랜' 최고 매출액 기록

완주군이 먹거리종합전략 '완주형 푸드플랜'을 전략적으로 실행하면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27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플랜 선도지자체로 선정된 후 군 실정에 맞는 푸드플랜 전략을 수립해 시행해왔다.

푸드플랜은 지역의 먹거리에 대한 생산, 유통, 소비 등 관련 활동들을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묶어서 지역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하고 좋은 식품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로컬푸드를 필두로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소비자에게 접근이 용이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비롯해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지역산 식재료 공급, 복지급식 로컬푸드 공급확대 등 유통망을 다양화 하면서 작년 한 해에만 로컬푸드 시행 이후 최고 매출액인 693억 원을 달성했다. 로컬푸드를 시행한 지난 2012년부터의 누적 매출액은 무려 4000억 원에 달해 지역경제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변화에서도 소비자에게 안전성을 인정받은 로컬푸드는 꾸준한 매출고를 올려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군은 향후 사회복지시설 및 기업체 등 관계시장 확대를 통한 지역산 먹거리 공급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염재복 기자

부안군, 5,344 농가에 쌀 직불금 74억 지원

부안군은 2020년산 군비 쌀 직불금을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이달 28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비 쌀 직불금은 관내 쌀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5,344농가, 1만 3424ha 면적을 확정하고 총 7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전북도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며 5ha 미만 경작자에겐 ha당 56만원, 5ha 이상 경작자에겐 ha당 53만 8,000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군은 올해 지급단가의 기준인 진흥·비진흥 구분을 없애고 비진흥단가를 ha당 13만 5,000원 인상해 작년 대비 3억원 이상이 농업인들에게 해택으로 돌아가 농가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활동을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병하 기자

정읍시, 임산부에 농산물 꾸러미 지원

정읍시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켜주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와 아이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가와 상생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선착순 182명으로 신청일 당일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출산한 기록이 있는 산모 또는 현재 임신한 임산부다.

대상자는 1년 동안 최대 48만원(본인 부담 96,000원 포함) 상당의 신선 농산물과 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5일까지 해당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에코이몰 홈페이지(http://www.eco-mall.com)를 통해서 가능하다.

/박기수 기자